

소득주도성장 정책 쟁점과 평가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 주제 발표

2017년 9월 27일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주제발표의 목적]**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경제정책 방향 가운데 '소득주도성장' 논의를 검토하고 그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정책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

- **[소득주도성장 논의의 특징]**

소득주도성장 논의 자체는 대통령선거 과정과 그 이후 정책적인 측면과 주로 관련된 이슈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학문적인 논의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 (1) '소득'내지는 '성장'과 같은 주요 경제분석의 대상 개념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 (2) 정책으로 집행되는 경우에 실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학술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

[주요 쟁점의 정리]

1. 명칭 및 정의 관련 쟁점
2. 학문흐름상의 쟁점
3. 현실인식상의 쟁점
4. 이론모형상의 쟁점
5. 정책처방상의 쟁점

I. 명칭 및 정의 관련 쟁점

- 정책명칭을 통해 당국의 인식과 의도 및 실제 정책수단을 파악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이와 다른 정책이 제시된다면 경제주체가 현실을 인식하고 해석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경제성장' 정의: (장기적인) 소득의 증가
- '소득주도성장': '소득의 증가를 통해 소득의 증가'를 이룬다는 명제로 전환 - 동의어 반복의 문제

소득을 y 로 정의하고 경제의 다른 변수들의 벡터를 X 라고 표현했을 때,

소득주도성장을 단어 그대로 해석해 소득에 관한 함수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함수가 필요하다:

$$y = f(y, X)$$

이를 성장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dot{y}/y 개념이 중요한데, $y = f(y, X)$

를 다시 정리하면 $y = \phi(X)$ 로 표현할 수 있고,

이를 성장률 개념으로 해석하면 결국 다음과 같은 방정식 형태이다:

$$\frac{\dot{y}}{y} = \Pi(X)$$

성장률은 X 벡터를 구성하는 변수들과 함수 형태에 의해 결정되지만 y 에 의해 영향 받는다고 하기는 어렵다.

[Question] 동의어 반복 문제를 극복하고 이론적 명제로 해석 가능한가?

- '소득주도성장' 논의의 원형적인 개념들을 정리한 국제노동기구(ILO)의 Lavoie and Stockhammer (2012)에서도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보다는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 개념으로 등장
- '임금주도성장'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결국 동일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따른 소득분배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고 이 경우는 이론적 가능성을 지닌 명제로 해석 가능
- 이상헌(2014)와 표학길(2016)처럼, 기존 국내연구에서 논문 제목으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명시적인 용어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논의 자체는 소득분배 특히, 노동소득분배율과 관련하여 진행되었음. (이상헌, 2014; 홍장표, 2014a, 2014b; 표학길, 2016)

소득 y 를 국민소득의 벡터로 간주해서 $Y = [y_1, \dots, y_n]$ 형태로 각 계층내지는 계급 n 의 소득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변화가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민소득 y 를 다음과 같이 각 계층 또는 계급 소득의 합으로 정의 한다:

$$y = \sum_{i=1}^N y_i$$

y_1, \dots, y_n 의 배분상 특징을 나타내는 값을 θ 라고 함으로써, 주어진 국민소득 \bar{y} 에 대해서 θ_1 을 $\theta_2 (\neq \theta_1)$ 로 변화시킴으로써 국민소득의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Y = h(Y, X)$ 함수를 $y = g(\theta, X)$ 형태로 정리한 후, 국민소득 성장률을 배분상의 특징변수에 대한 함수로 간주하는 것이다:

$$\frac{\dot{y}}{y} = Z(\theta, X)$$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명칭보다는

임금주도성장론

재분배성장론

노동소득분배성장론

개념에 근거해서 논의하는 것이 맥락을 전달하는데 보다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II. 학문흐름상의 쟁점

[Question] 소득분배의 변화내지는 노동소득으로의 소득분배 이동을 통해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학술적 흐름은?

- 최근에도 소득분배의 추이와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존재: Piketty and Saez, 2003; Alveredo et. al., 2013; Mankiw, 2013; Acemoglu and Robinson, 2015; Jones, 2015; Kopczuk, 2015; Piketty 2015 등 – 소득분배 악화에 대한 문제인식 그러나 직접적인 소득재분배와 성장의 관계를 강조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전통적으로 소득분배 문제를 분석의 초점에 둔 흐름은 흔히 신(新) 리카도학파와 후기-케인지안학파(Post-Keynesian)로 불리는 일군의 학자들을 들 수 있음.
- 케인지안이론을 재분배 관점에서 접근하며 성장이론으로 확대한 포스트케인지안 Kalecki가 대표적인 경우(Lavoie and Stockhammer,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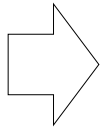
[Question] 소득불평등이 장기적인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만약 영향이 있다면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이 장기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 소득재분배 논의는 성장동력보다는 주로 정당성의 문제로 논의됨.
 1. Utilitarian Social Welfare Function
 2. Maximum Criterion (Rawls, 1971)
 3. Externalities and Pareto Improvement
 4. Commodity Egalitarianism
 - 소득이동성 강조: Gottschalk and Spolaore, 2002; Hertz, 2006; Lee and Solou, 2006
 - 소득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채널: 권력 독점에 기반한 부패를 통한 타인의 소유권침해; 재산권/소유권의 강조
 - You and Khagram (2004)
 - Glaeser, Scheinkman, and Shleifer (2003)

[Major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 Neoclassical Growth Theories: Ramsey (1928), Solow (1956), Swan (1956), Cass (1965), Koopmans (1965)
 - Including human capital - education, experience, and health:
Lucas (1988), Rebelo (1991), Caballe and Santos (1993), Barro and Sala-i-Martin (1995)
- Endogenous Growth Theories: Romer (1986, 1987, 1990), Lucas (1988), Rebelo (1991), Grossman and Helpman (1991), Aghion and Howitt (1992)

- 기존 연구에서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이론적인 핵심 채널내지 변수로 파악되는 경향은 약함.
- 신고전파적 성장이론: (1) 자본축적과 기술진보
- - (2) 교육과 인적자본
- 내생적경제성장이론: 연구 및 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동력의 확보와 기술혁신이 견인하는 자본축적
- 소득재분배내지는 노동소득분배 개선이 다른 요인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
 - 소득불평등이 재산권 훼손/정치적인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면
=> 자본축적과 혁신/기술진보의 저해
 - 소득불평등이 인적자본 축적을 저해할 정도라면



불평등 및 분배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널에 대한 실증분석 차원의 기존 연구

=> 증세로 인한 경제성장 약화 내지는 정치적 불안정성 채널이 주로 작동

- Alesina and Rodrik (1994): 불평등 => 증세 => 경제성장 약화
- Alesina and Perotti (1996): 불평등 - 정치적 불안정성 채널로 투자에 영향

⇒ 실증분석에서는 성장과 투자의 핵심채널로서 인적자본이 역할

- Alesina and Rodrik (1994); Alesina and Perotti (1996); Barro (1996); Benhabib-Spiegel (1996); Bourguignon (1994); Clarke (1992); Deininger-Squire (1995); Easterly-Rebelo (1993); Keefer-Knack (1995); Lindert (1996); Perotti (1996); Persson-Tabellini (1994, 1996); Svensson (1993)

- 불평등이 인적자본 형성을 방해한다면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채널 작동가능

=> 일반적인 분배 자체 또는 수요측면보다는 불평등이 인적 자본 형성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극복해서 인적 자본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중요

	1		2		3		4			5			6		7		8		9		10	
	INEQ on		DEM on		DEM*INEQ on		INEQ on REDIST			REDI ST on GR, INV			HUMCAP on		CRED on		CRED*INEQ on		INEQ on		INSTAB on	
	GR,	INV	GR,	INV	GR,	INV	TRAN,	TAX	EDEXP	TRAN,	TAX	EDEXP	GR,	INV	GR,	INV	GR,	INV	INSTAB		GR,	INV
1 Alesina Rodrik (94)	--		0		0								++									
2 Alesina Perotti (96)													++						++		-	
3 Alesina et al (96)			0										++						++		--	
4 Barro (96)			^									+	M++, F--								--	
5 Benhabib-Spiegel (96)	(-)												++								(-)	
6 Bouruignon (94)	--												++									
7 Brandolini-Rossi (95)	0																					
8 Clarke (92)	--				0								++									
9 Deininger-Squire (95)	(-)		±		+								+									
10 Devarajan et al (93)										+		(-)										
11 Easterly-Rebelo (93)									+	(-)			++								+-	
12 Keefer-Knack (95)	--		(-)		±		(-)						++						++		--	
13 Levine-Renelt (92)																					-	
14 Lindert (96)							--		(-)	±		++	++									
15 McCallum-Biais (87)										++												
16 Perotti (92)	--						(-)		±	+			+		--		-		++		--	
17 Perotti (94)	--						(-)			(+)			0									
18 Perotti (96)	--		0		(-)		(+)		(+)	++		++	M++, F--						++			
19 Persson-Tabellini (94)	--				--					(-)			++									
20 Persson-Tabellini (96)	--		-		--		(+)			(-)			++									
21 Sala-i-Martin (92)										++												
22 Svensson (93)													++						+		--	
23 Venieris-Gupta (86)	--																				--	

출처: Aghion and Howitt (1998)에서 재인용

* [이론] 이론분석 상에서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이론적인 핵심 채널로 파악되기보다는, 소득재분배내지는 노동소득분배 개선이 다른 요인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 것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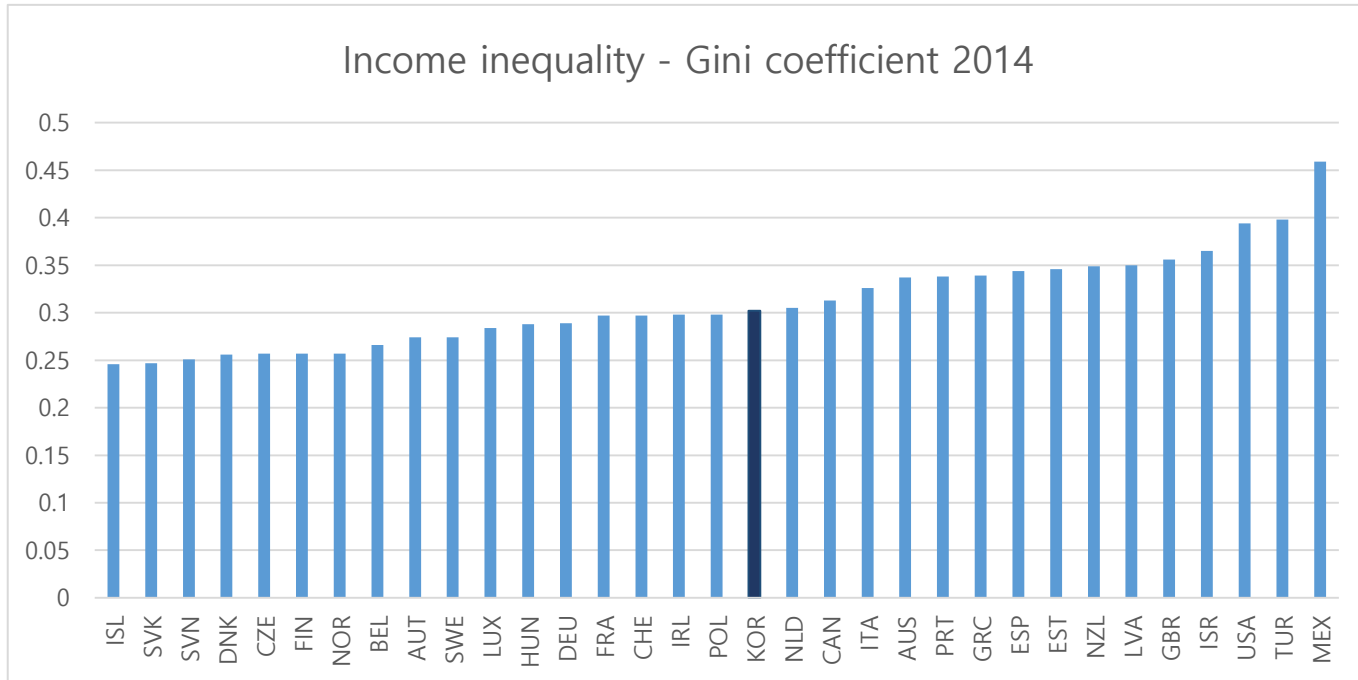
* [실증] 실증분석 상에서는 소득불평등내지는 소득불평등 해소가 경제성장의 핵심 채널로 발견되기보다는, 정치적 불안정성과 인적 자본이 성장에 영향을 주는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요인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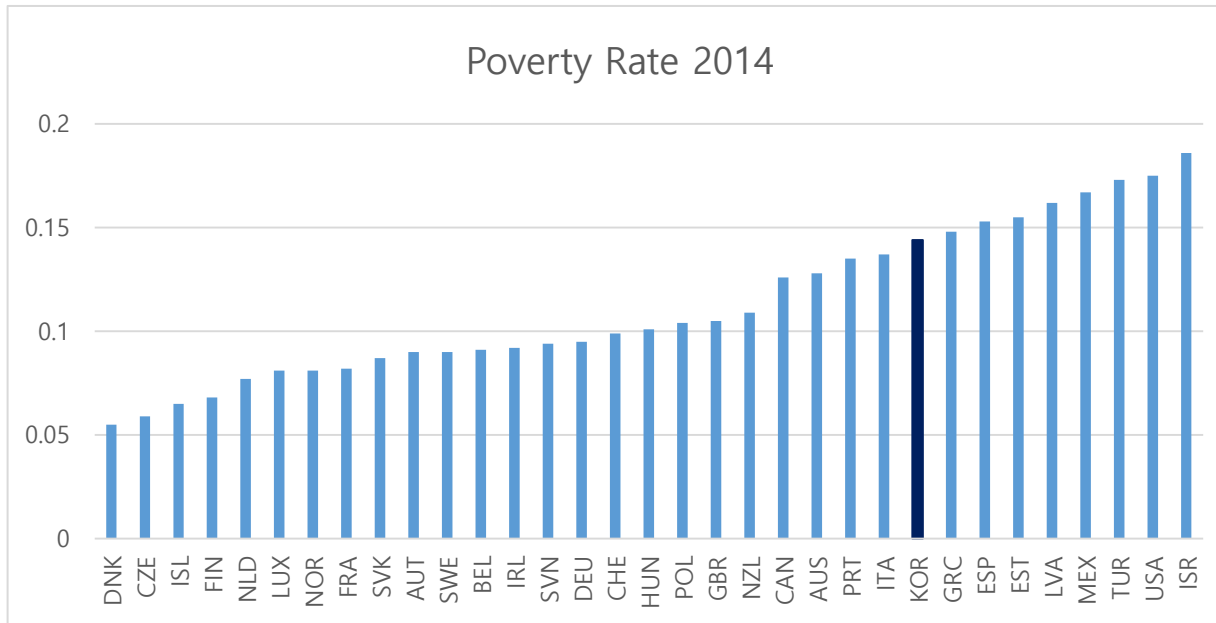
III. 현실인식상의 쟁점

- 소득분배주도 경제성장이나 노동소득분배 강화 경제성장에서 강조하는 일반적인 소득불평등 또는 노동소득분배 문제보다 청년실업과 빈곤, 특히 노인빈곤이 실제로는 가장 큰 문제일 가능성
 - 일반적 소득불평등과 주로 관계된 Gini 계수 상의 문제보다는 빈곤과 관련된 문제가 상대적으로 보다 심각할 수 있음.
 - OECD 국가 가운데 Gini 계수 소득불평등은 한국 중간 정도에 위치 (2014년 기준)
 - 일반적인 불평등 자체보다 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
 -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빈곤율은 높은 편으로 판단 가능 (2014년 기준)
 -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가장 높은 정도
 - 실업률 자체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청년실업률 문제
- => 일반적인 재분배 문제보다 경기침체 및 노동시장 구조 문제일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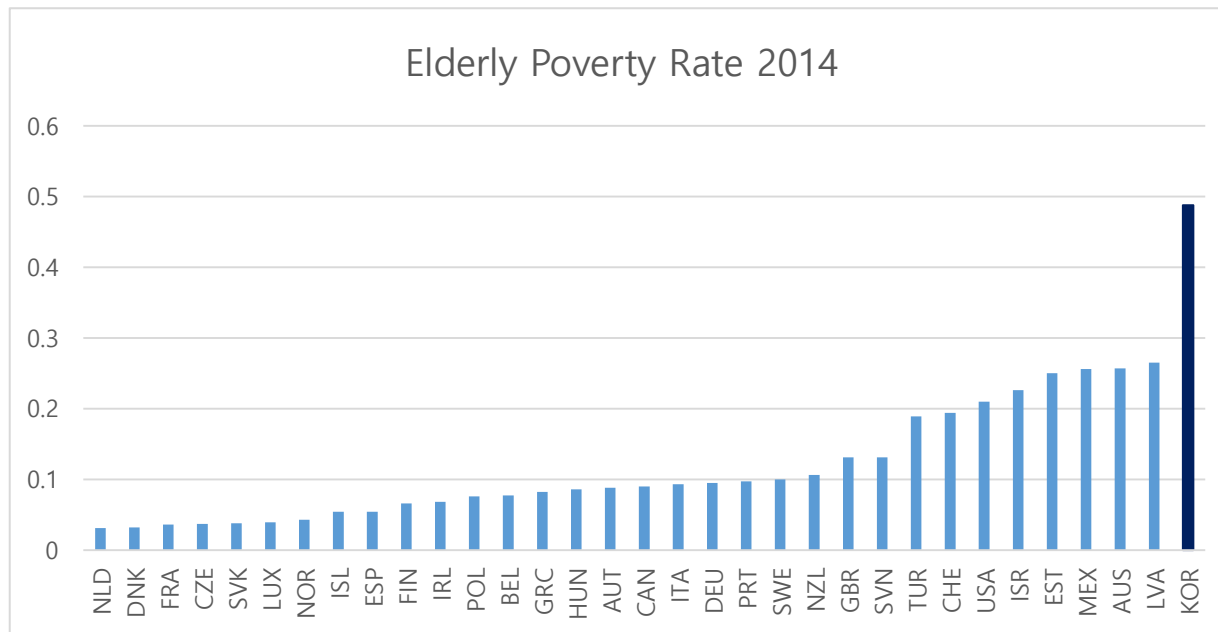
- 노동소득 분배 또는 재분배 이슈보다
청년실업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와
퇴직 이후 노인빈곤이 핵심 문제일 가능성
- ⇒ 일반적 분배내지는 일반적 재분배가 경제의 근본 문제이기보다
- ⇒ 빈곤과 청년실업과 관련된
- ⇒ 경기침체 및 노동시장 구조가 문제일 가능성

- 지니(Gini) 계수를 통해 본 소득불평등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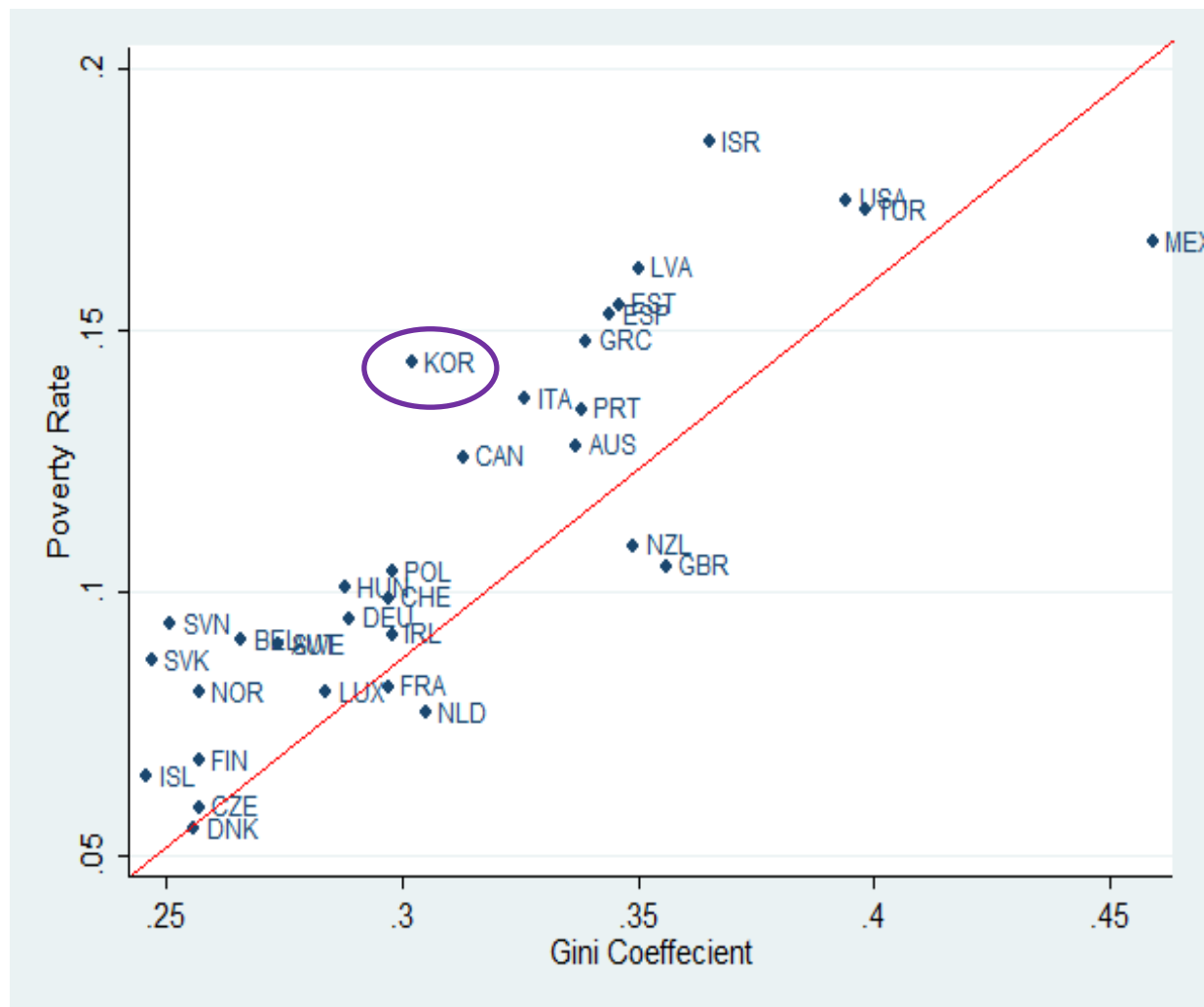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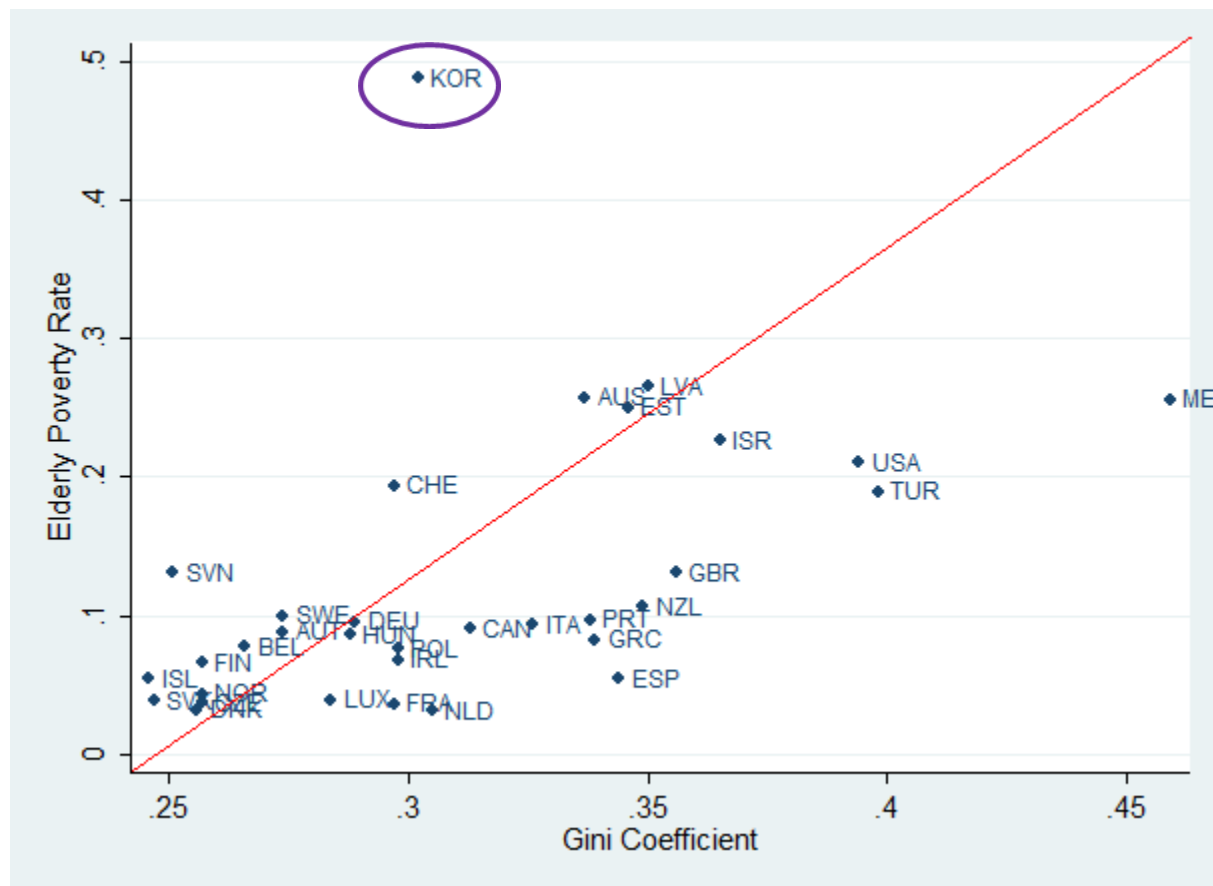


- 빈곤율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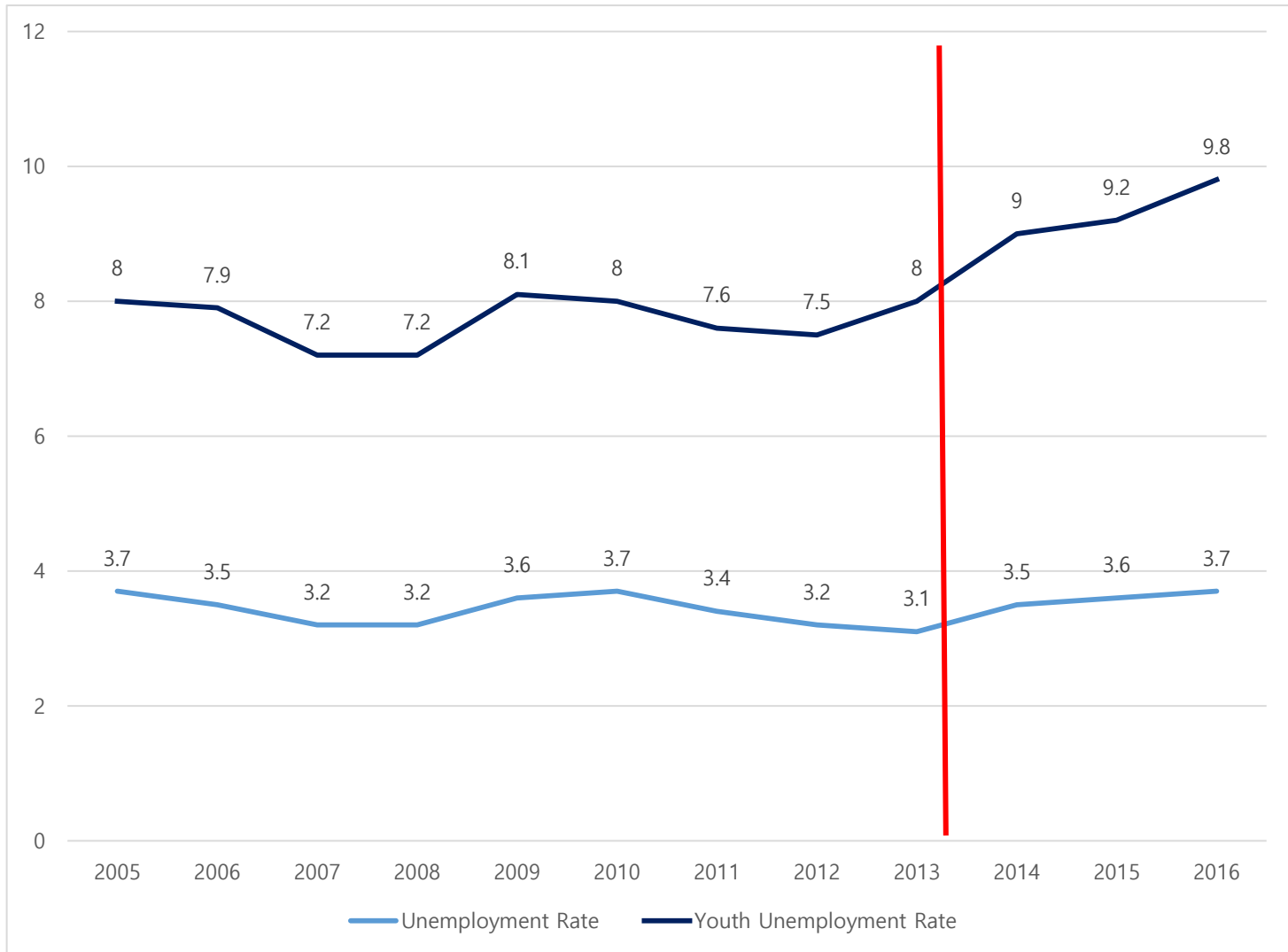


- 노인빈곤율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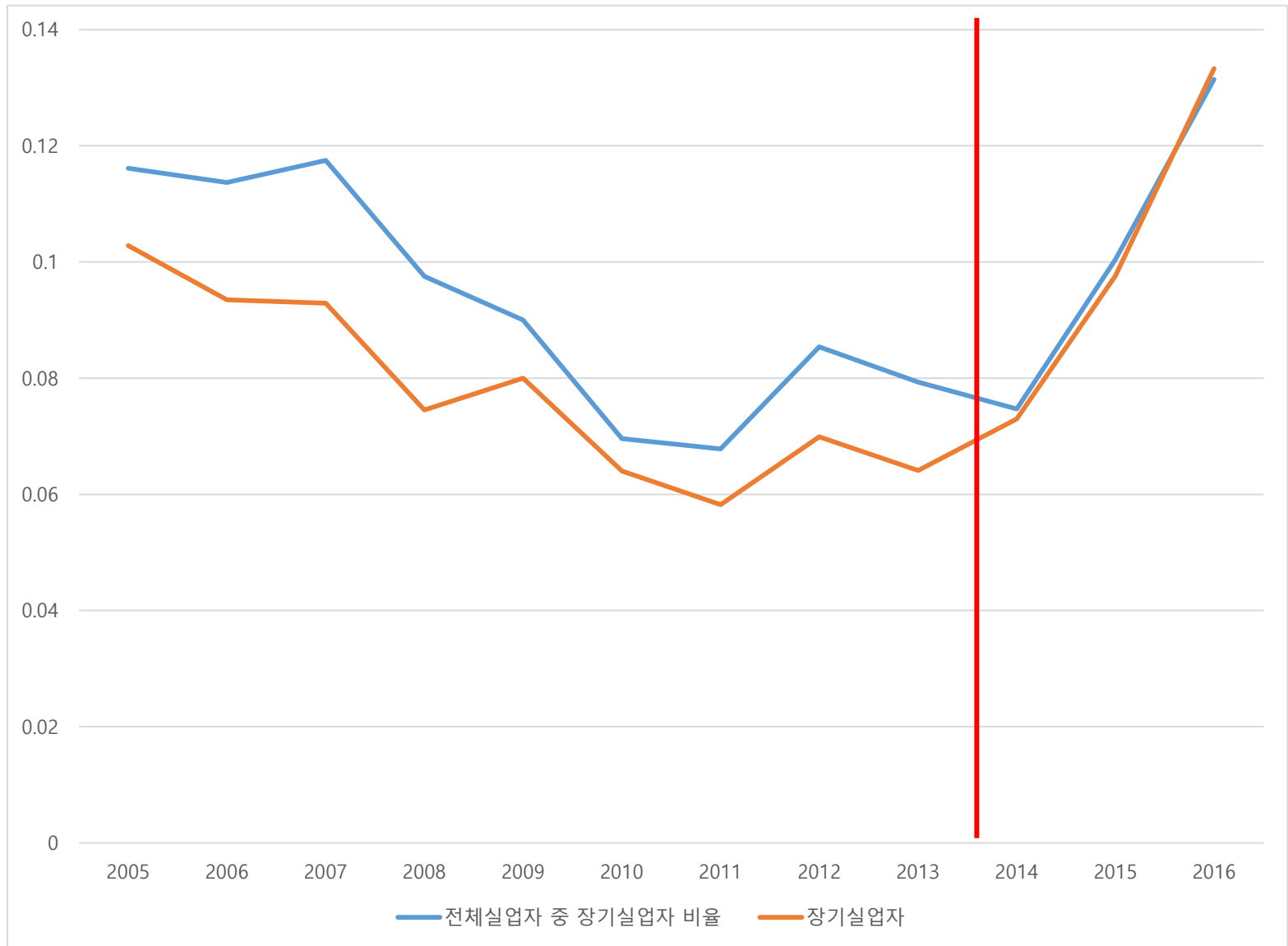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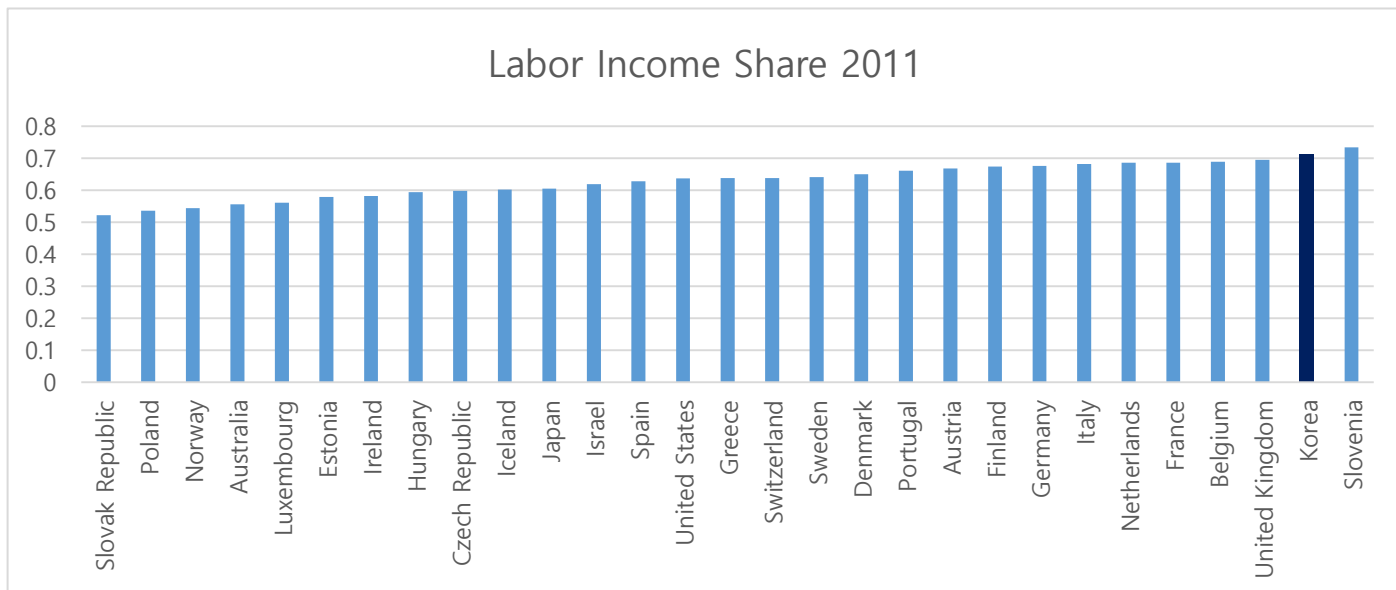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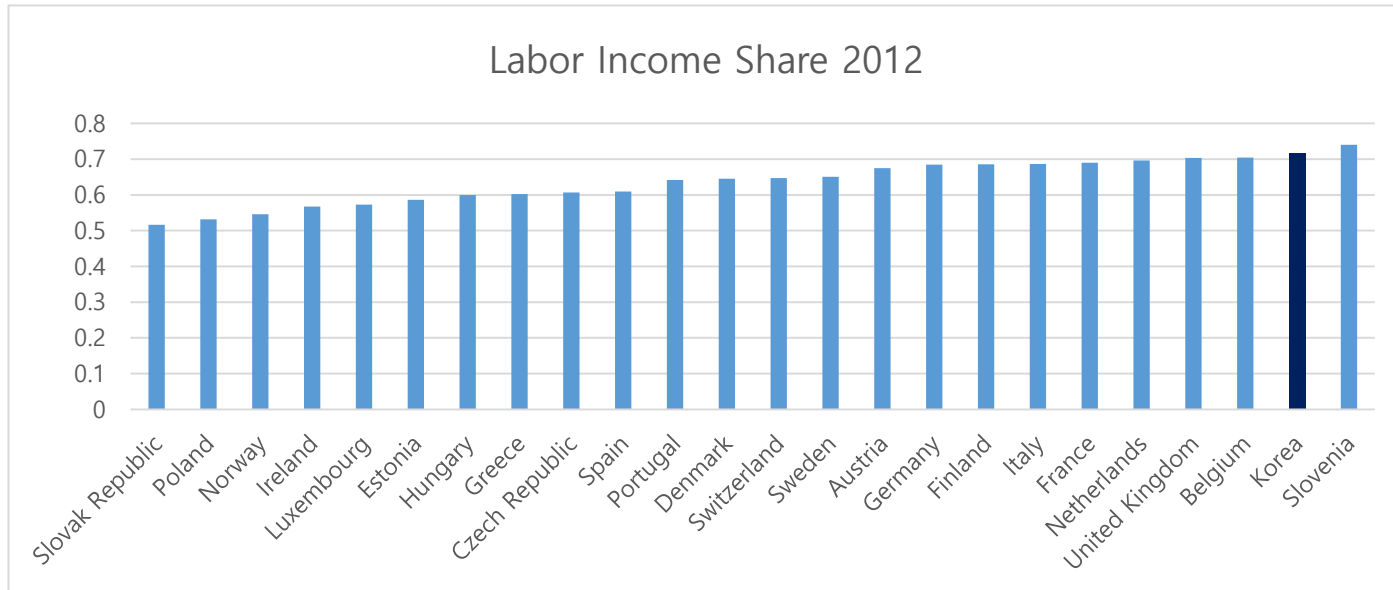
- 실업률/청년실업률의 변화추이



- 장기실업자 숫자 및 비중 변화추이



- OECD 국가노동소득분배율 국제비교



IV. 이론모형상의 쟁점

[Question] 소득분배의 변화내지는 노동소득으로의 소득분배 이동을 통해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론모형으로의 가능성?

- 케인지안 모형에 맑스적인 강조점을 결합시키는 경우 분배를 분석의 핵심에 놓은 칼레츠키(Kalecki) 모형 전개 가능
- 소득주도성장을 임금주도성장 내지는 분배강조성장이론으로 해석할 때의 원형적인 이론으로의 Kalecki 모형의 특징
 - (1) 부문불균형이론: 자본재/임금재 부문의 불균형
 - (2) 과소소비이론: 생산능력에 비해 소비/수요의 부족
 - (3) 분배갈등이론: 임금과 이윤의 갈등
 - (4) 이윤율저하법칙: 자본축적과 이에 따른 이윤율 하락

⇒ (Marx) 공황이론의 이론적인 특성을 공유:

- 공황의 필연성과 사회주의 혁명논의는 제외

[Kalecki 모형 기본 구조]

- 과점시장구조하의 임금(노동비용)에 일정 마크업을 더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가격설정 – 마크업 가격설정(Mark-up Pricing)
- 노동소득비중과 이윤(자본소득)비중으로 분해 – 마크업율(Mark-up Ratio)이 분해비중에 영향 => 독점력이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비중에 영향
- 저축률은 소득분배에 의해 결정: 자본가(기업가) 계층과 노동자 계층의 저축성향이 다르다고 가정
=> 자본가계층의 저축성향이 노동자계층의 저축성향보다 높다고 가정
(노동자계층의 소비성향이 높음)
- 생산시설은 과소 활용된다고 가정 – 유희자본(시설)의 존재:
 $u < v$ = output-capital ratio with full utilization
- 유희생산시설의 존재 정도와 이윤비중이 투자수요를 결정

[예] 독점력이 높아 이윤(자본소득)의 비중이 높은 경우 전체적인 저축률이 높아지며 소비/수요가 부족할 가능성 (생산시설이 과소 활용되는 상황)

- 소득분배 조정에 따라 가능한 채널:

(1) 이윤분배증가에 따라 생산시설활용도가 감소하는 경우 – 임금주도수요

- 이윤(자본소득)의 비중이 높은 경우 전체적인 저축률이 높아지며 소비/수요가 부족할 가능성 (생산시설이 과소 활용되는 상황)

(2) 이윤분배증가에 따라 생산시설활동도가 증가하는 경우 – 이윤주도수요

⇒ 임금주도성장 또는 소득재분배 강조정책의 경우 1번 채널을 강조

- (1)번 채널의 작동 조건: [1]번 조건과 [2]번 조건이 함께 만족되어야

[1] 투자함수가 생산시설활용도에 강한 영향을 받아야

[2] 자본가계층과 노동자계층의 저축성향이 큰 차이를 보여야

[1] 투자함수가 생산시설활용도에 강한 영향을 받아야

[2] 자본가계층과 노동자계층의 저축성향이 큰 차이를 보여야

⇒ [1]번 조건과 [2]번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도

⇒ 결국 자본가동률(output-capital utilization, u)을 (단기적으로) 높이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부양이라는 측면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 결국 완전가동하의 산출물-자본 비중(output-capital utilization, v)을 높이
지 못한다면 궁극적인 경제성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성장정책보다는 케인지안 경기관리정책 성격으로 환원 - 다만 계층별 한
계저축(소비)성향의 차이에 따른 상이한 승수효과를 활용한다는 차원

- 경기관리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이 보다 높은 승수효과로 동일한 정부정책에 대해 더 큰 경기부양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해석

-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조세/소득이전 정책이 고소득층의 (이전된 조세/소득이전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계소비성향 차이를 이용한 승수효과를 유지할 수 있음.

[케인시안 정책이 효과 내려면, 2017년 5월 25일 매일경제신문 기고문]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되면서 이를 극복하는 처방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새 정부에서는 '사람 중심 성장경제'라는 주제 아래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1930년대 미국 대공황 극복 과정에서 뉴딜정책으로 시행된 바 있고, 그 이후 재정을 통해 경기를 관리하는 케인시안(Keynesian) 경제이론의 이름으로 발전하면서 학계에는 잘 알려진 정책이다. 최근에는 미국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하버드대 래리 서머스 교수가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

.....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되면서 이를 극복하는 처방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새 정부에서는 ‘사람 중심 성장경제’라는 주제 아래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1930년대 미국 대공황 극복 과정에서 뉴딜정책으로 시행된 바 있고, 그 이후 재정을 통해 경기를 관리하는 케인시안(Keynesian) 경제이론의 이름으로 발전하면서 학계에는 잘 알려진 정책이다. 최근에는 미국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하버드대 래리 서머스 교수가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원래 케인시안 경제이론은 장기 경제성장보다 단기적인 경기관리에 초점이 있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가 세금을 줄이거나 재정지출을 증가시켜 경제 전체의 수요를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가 과열될 때는 세금을 늘리거나 재정지출을 감소시켜 경제 전체의 수요를 줄인다는 개념이다. 미국에서 1970년대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경기관리에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받았고, 그 이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통화주의 이론이 강조되면서 영향력이 약화됐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기회복 과정에 집행되면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

출처: “케인시안 정책이 효과 내려면,” 2017년 5월 25일 매일경제신문
성태윤 교수 기고문

.....

그러나 경기회복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이 장기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는 논란의 대상이 되곤 했다. 따라서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더라도 어떤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물론 케인시안 이론이 경제성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후기 케인시안(Post-Keynesian) 이론에 영향을 끼친 미하우 칼레츠키는 케인시안 이론을 재분배 관점에서 접근하며 성장이론을 포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케인스나 칼레츠키 모두가 강조한 것은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회복이나 성장을 이끌어내려면 일종의 '승수효과(乘數效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승수효과란 정부가 지출한 금액이 추가적인 민간 수요를 만들어 정부 지출액보다 몇 배로 큰 국민소득의 증대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승수효과를 높이려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계층, 즉 자신의 소득이 늘었을 때 소비를 증가시키는 정도가 큰 저소득층 소득을 높이도록 정부 정책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득이 많아 추가 소득이 생겨도 소비를 크게 늘리지 않는 계층에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소비나 투자를 자극하지 못해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

출처: "케인시안 정책이 효과 내려면," 2017년 5월 25일 매일경제신문
성태윤 교수 기고문

.....

그리고 저소득층 소비를 높이는 방향과 함께, 기업이나 자본가 계층이 기존에 비해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투자를 증가시키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은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생산이 늘어나고 관련된 사람들의 소득과 소비가 연쇄적으로 증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가 직접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승수효과를 높이는 것과 거리가 있다. 우선, 소득이 낮거나 재산이 적은 순서로 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저소득층 소비를 자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무원 채용과 같이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에 대한 재정부담이 존재해서 지속적인 재원이 필요한 부문에 재정지출이 집중되면, 가게나 기업 같은 시장참여자들은 미래 조세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해 현재의 소비를 감소시키거나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재정지출 자체가 만들어내는 일시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승수효과에 따른 추가적인 경기회복은 제한적이고 특히 장기 경제성장은 요원해진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공약에 대한 재원조달 문제로 공방이 있어왔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성과로 실제 연결되려면 지출 자체는 저소득층에 집중하고 미래에 너무 큰 재원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이제는 중요한 시점이다.

출처: "케인시안 정책이 효과 내려면," 2017년 5월 25일 매일경제신문
성태윤 교수 기고문

- 개방경제하 이론적 모형 적용의 어려움

=> 임금인상에 따른 비용조건을 압도할 수 있는 수요조건 개선(소비 증가)과 이를 통한 생산시설활용도 증가가 필요

⇒ 개방경제하에서는 (특히 수출기업의 경우) 임금인상에 따른 비용조건악화가 국제가격경쟁력의 저하로 나타나는 가운데 (해외에서 결정되는) 수요조건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수출기업의 임금인상이 생산시설활용도 증가로 이어지기 보다는 생산시설활용도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

- 국제적으로 독점력을 확보한 기업의 경우가 아니라면 그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

⇒ 국제시장에서 독점력을 확보하거나 과점적인 체제를 가진 기업은 대개 자본-장비장착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임금인상으로 인한 수요확대가 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 많은 경우 국내에서는 독점력을 가지고 있어도 국제시장에서는 그러한 독점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많은 기업은 기업운영상의 부담으로 생산시설활용도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

[이론적 가능성]

케인지안 모형에 맑스적인 강조점을 결합시키는 경우 분배를 분석의 핵심에 놓은 칼레츠키(Kalecki) 모형 형태로 소득분배의 변화내지는 노동소득으로의 소득분배 이동을 통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이론모형으로의 가능성은 존재 - Kalecki

[Kalecki 모형 기본 구조]

과점시장에서의 독점력에 근거한 마크업 방식으로 가격을 설정하고, 이러한 독점력이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분배 방식을 결정한다고 보되,
저축률은 소득이 분배 방식에 의해 영향 받는다고 보고,
자본가계층의 저축성향이 노동자계층의 저축성향보다 높아서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는 경우에 수요(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과소활용되던 생산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구조

=> 소득분배 이동을 통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채널 자체는 가능성으로 존재하지만, 동일한 모형내에서 함수내 파라미터에 따라 다른 방향(이윤주도성장) 채널도 이론적으로는 가능

[Kalecki 이론 모형에서 임금상승이 효과를 내기 위한 조건과 한계]

- (1) 투자함수가 생산시설활용도에 강한 영향을 받아야 하며,
- (2) 자본가계층과 노동자계층의 저축성향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조건이 모두 만족되는 경우에 임금상승이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결국 자본가동률(output-capital utilization, u)을 (단기적으로) 높이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부양이라는 측면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완전가동하의 산출물-자본 비중 (output-capital utilization, v)을 높이지 못한다면 궁극적인 경제성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성장정책보다는 케인지안 경기관리정책 성격으로 환원되는 한계 – 다만 계층별 한계저축(소비)성향의 차이에 따른 상이한 승수효과를 보다 명시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의 의미는 있음.

[임금인상내지는 소득분배주도 성장 모형을 한국과 같은 개방경제하에서 적용하기 가장 어려운 난점]

임금인상이 경기부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임금인상에 따른 비용조건을 압도할 수 있는 수요조건 개선(소비 증가)과 이를 통한 생산시설활용도 증가가 필요 - 임금인상으로 이러한 조건을 개방경제하에선 만들기는 어려움.

⇒ 개방경제하에서는 (특히 수출기업의 경우) 임금인상에 따른 비용조건악화가 국제가격경쟁력의 저하로 나타나는 가운데 (해외에서 결정되는) 수요조건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수출기업의 임금인상이 생산시설활용도 증가로 이어지기 보다는 생산시설활용도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

⇒ 국제시장에서 독점력을 확보하거나 과점적인 체제를 가진 기업은 대개 자본-장비장착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임금인상으로 인한 수요확대가 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 국내에서는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많은 수가 국제시장에서는 그러한 독점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쟁적인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비용압박이 가해지면 기업운영상의 부담으로 생산시설활용도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

V. 정책처방 상의 쟁점

-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명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형태로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정책처방은 본질적인 의도와 다른 형태의 정책이 되거나 경제주체들의 정책해석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음.
- 소득불평등 문제를 현실인식과 정책 처방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성은 학문적으로도 제기되어 왔으나, 성장수단으로서 보다는 소득불평등이 가지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서의 재산권, 정치적 불안정성 해소 등을 통해 다른 성장채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소득불평등 해소는 경제성장의 메인 채널이라기 보다는 경제성장의 다른 핵심요소들이 적절히 역할 하도록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큰 의미가 있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정책처방에 있어서 소득불평등 해소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경제성장 정책은 아닐 수 있음을 구분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음.

V. 정책처방 상의 쟁점

- 정책처방에 있어서 일반적인 노동소득에 대한 분배를 높이거나 일반적인 소득불평등 개선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오히려 일반적인 소득불평등이나 분배 문제보다는 빈곤 문제내지는, 특히 노인 빈곤 문제가 핵심일 수 있으며, 장기 경지침체와 노동시장 구조 문제가 연결될 수 있는 청년실업 문제가 역시 핵심일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인 소득불평등 개선정책이나 특정 생산요소(노동) 지향 정책이 핵심이 아니라 노인빈곤과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구체적인 정책 목표로 지향할 필요성이 있음: 경기회복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
- 일반적인 소득불평등 개선정책이나 특정 생산요소(노동) 지향 정책 보다는, 이러한 특정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경기회복 정책처방,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일반적인 임금상승에 따른 기업환경악화와 재정지원 관련된 건전성 압박 문제를 더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음.

V. 정책처방 상의 쟁점

- 문제인식의 필요성과 효과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제 전반의 전면적인 소득재분배 내지는 임금인상 정책으로 수행하기에는 이론적인 다른 가능성 역시 상당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책목표를 보다 분명히 설정하고 대상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효과적인 채널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엄밀한 정책적인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정책처방이 엄밀한 정책적인 설계 하에서도 여전히 경제성장을 담보한다기 보다는 여전히 경기관리적인 측면의 가능성이 실제로는 높기 때문에, 경기관리상의 정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장정책으로 인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함.
- 이러한 논의와 정책처방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접근보다는 경기관리상의 필요성이 있지만, 장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보다 구체적인 성장정책의 모색과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V. 정책처방 상의 쟁점

- 내수확대와 이를 통한 수요창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개방경제적인 성격을 실제 정책처방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재분배정책과 노동소득분배정책이 만약 추가적인 국내 수요를 만들어내더라도 국제경쟁에 노출된 기업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키거나, 이에 따라 기업/자본유출을 강화하는 경우, 의도된 정책목표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함.
- 대외기업의 상황개선이 있다면 이는 재분배정책과 노동소득분배정책에 따른 효과보다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외부환경개선에 기인한 경우의 가능성이 높음을 인식해야 함.

=> 현실인식과 이론적 흐름 상에서 정책으로서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 제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명칭과 같이 성장정책으로 해석하고 접근하는 경우에는 호의적인 정책의도와 관련 없이 오히려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구체적인 정책설계에 쟁점상의 의미를 보다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